

# “내 땅 못 지나가” 길 막은 사유지...초등생 등하굣길 불편

광주 북구 대자초 후문 앞 도로 39㎡ 땅 소유자 펜스 설치해 차단 시교육청에 매입가 4배 구매 요구 예술의 거리 골목서도 차단기 논란 주민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유주 “구청 허가 받고 설치한 것”

광주 곳곳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지라며 수십 년 이상 사용돼 온 도로를 폐쇄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길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학교 후문 앞을 펜스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후문 앞 39㎡(12평 가량) 부지를 둘러싼 펜스가 설치됐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무단으로 훼손하지 마세요’라고 쓴 현수막도 걸렸다. 펜스와 현수막은 광주지역 한 부동산 개발 업체인 토지 소유주가 토지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

업체의 소유권 행사로 평소 이 길로 등·하교해 온 대자초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하면 교직원 등의 차량이 정문만을 이용해야 하는 탓에 학생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

지 ‘부지를 사지 않으면 건물을 올리겠다’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는 지난 2020년 6월 2300여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제시한 금액은 9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교직원들의 통행 불편을 우려해 토지매입과 학교 후문 위치 조정 두 가지 방법을 두고 복구청과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지난 2006년 복구가 보유한 대자초 후문 인근 대지 528㎡(약 160평)으로 후문을 옮기는 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매입불가’ 통보를 했고 이후 소유주는 학교 후문 앞에 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학교 후문 위치 변경은 예산 확보 등 절차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 학생·교직원들은 상당기간 불편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광주일보가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고,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도 지난 5월 토지 소유주가 차단기와 차단봉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단기를 설치한 곳은 약 60㎡(18.2평) 부지로 주민들이 평소 이용해 온 골목길이다.

차단기를 설치한 이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 A씨다. 그는 골목 입구의 한쪽 건물 소유주이자 건물 바로 뒤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주차장 운영과 주차비용 정산 등을 이유로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후문 앞 사유지에 플래카드와 함께 출입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들은 결국 지난 6월 광주지법에 ‘통행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A씨에게 차단봉 철거 명령을 내린데 이어 불이행시 1회당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이의신청을 했고 1000만원 공탁금을 내고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시 차단봉이 내려진 상태다.

A씨는 “해당 골목은 단 한번도 차량이 다닌 적 없는 도로이고, 골목 부지 중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은 거의 없다”며 “2020년 건물 엘리베이터 증축 신고 당시 동구청에서 차단기 설치를 허가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사유지 사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라며 “조례나 분청조정위원회 등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목포 상가 화장실서 여자친구 살해 도주한 현직 해양경찰관 긴급 체포

목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현직 해양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목포경찰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해양경찰관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순경인 A씨는 15일 새벽 6시 10분께 목포시 상

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종업원에 의해 발견된 B씨는 안면부 출혈과 목 부위가 졸린 흔적이 있어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상가 주변 CCTV를 확인해 이날 새벽

2시께 A씨와 B씨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독일 잼버리 대원-숙박업소 갈등에...시민이 숙박비 기부

“광주에 대한 좋은 추억 안고 가길”

광주의 한 시민이 독일 잼버리 대원의 숙박비를 기부했다.

잼버리 대원과 모델업주간 숙박비 문제로 갈등을 빚자 대원들에게 광주에 대한 좋은 추억을 안고 가라는 의미에서 방값을 냈다.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의 한 모텔에 머문 독일 잼

버리 대원들과 숙박업소 업주간 ‘고소 소동’이 발생했다.

당시 대원들은 업주에게 ‘개인 소지품이 있으니 방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가 이들이 머문 객실을 청소하고 문을 열어두자 경찰에 신고했다.

업주는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원들

도 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원들이 숙박비를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주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민 A씨는 15일 광주시 서구 총무팀에 “서구를 방문한 손님들이나 숙박비를 환불해주고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게 해주고 싶다”며 이틀치 숙박비 70만원을 기부했다.

서구는 같은 날 오후 독일 잼버리 대원 측에 숙박비를 전달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전주지법, 제3자변제 정부 공탁 ‘제동’

이의신청 전국 첫 기각결정...양극덕 할머니 등 광주 판결 영향 미칠 듯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대위변제 공탁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국)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이 대한민국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데 따라 광주지역 피해자인 양극덕(95)할머니와 이춘식(103)할아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 중인 광주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각의 근거로 민법 제 469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 재단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공탁자인 채권자들과 의사가 충돌할 경우 신청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채권은 불법행위(불법 강제동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중에서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정신적 위자료라며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단이 공탁관이 공탁을 불수리처리를 한 것에 대해 심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단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고(故) 정창하·박해옥 유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방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전주지법·수원지법 등의 공탁관은 재단의 신청을 불수리 처리했고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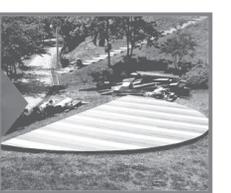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1509001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